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산업자원부를 퇴출시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1년이 흘렀다. IMF 극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수많은 개혁이 단행됐고,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5대재벌을 비롯한 30대그룹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정치, 금융, 재벌, 언론, 노동 등 IMF 6대 원흉들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것은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된 것과는 다르게 여타부문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은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5대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은 처음 오너들의 반발과 소극적 대응으로 지지부진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재벌-관료-금융 유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또다른 부실을 잉태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노동부문은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에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첨병으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가 더이상 극성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팽배해 있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지역갈등까지 끌어들이며 국가산업을 「아르헨티나」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정치와 언론은 아직까지 개혁이나 구조조정과는 동떨어진 별천지에서 살고 있는 상태이다.

정치권은 수억원 수천만원을 꿀꺽 삼키고서도 뻘뻘스럽게 정치탄압이나 지역차별이니를 외치는가 하면, IMF의 전도사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지역차별로 탈바꿈시켜 「갱제」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TV는 아직도 사랑놀음과 지역갈등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고, 신문들은 투기꾼의 앞잡이를 넘어 지역갈등 조장에 기득권층의 개혁저항 전도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무디스 및 S&P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1-2단계 상향조정했거나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아니올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답이 아닌가 한다. 개혁과 구조조정에는 찬성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부담도 감내하지 않겠다는 「이중성」은 과거를 반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정부부서나 관료조직은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다. IMF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직무이고 지상과제이건만, 자리보신과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나머지 정책대안을 개발·수립하거나 추진하는데는 「나 몰라라」로 끝이다. 산업자원부가 그 대표적인 부서이다. 필자가 화학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이 산자부 기초소재와 및 생물화학화에 화학저널을 다량 배포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모기업은 스스로 구독료를 지불할테니 산자부에 화학저널 30-40부를 정기적으로 배포해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다. 해당국이나 과 담당자들이 화학산업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화학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푸념인 것이다.

하지만, 화학산업을 세계 정상으로 육성하겠다는 열정은 고사하고, 화학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는 터에 전문지 몇권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화학저널 창간 8년이 넘었건만 유료구독은 말할 것도 없고, 8년동안 무료구독에 돌아온 것은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압력이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말이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빚잔치가 IMF의 주범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 및 중앙부서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도 국가경제를 망친 중범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우치기는커녕 철갑통을 앞세워 국가경제를 망치는데 여념이 없으니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나아가 DJ의 개혁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란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DJ의 정치철학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토양이 너무 박약하다는 판단이 옳다고 본다. 위기에는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가격카르텔을 용인함으로써 화학산업을 망친 장본인들은 왜 승승장구하는 것일까?